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인지도를 중심으로\*

이재완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책인지도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우선 서울시민들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책인지도에 따른 주민참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책인지도가 높은 집단이 주민참여의 평균도 더 높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결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책인지도가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책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주민참여도 높아지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일반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전제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로 연결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정책인지도가 실제 주민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마을공동체 사업, 정책인지도, 주민참여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책인지도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초기단계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용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경향신문」, 2012).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일반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한 마을에 사는 이웃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회복하는 정책인 것이다(「시민일보」, 2012). 서울시는 2012년 35개 사업 총 725억 원, 2013년에는 22개 사업 총 222억 원을 지원하였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됨(NRF-2010-330-B0031).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그 사업의 법적 근거로 2012년 3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같은 해 6월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과 홍보, 일꾼 발굴 및 육성, 네트워크 사업, 사업계획 수립과 실행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였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공동체 회복으로 주민참여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문석진, 2013: 39). 그러나 사업 시행 초기단계여서 주민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며,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확보하기 어려웠다(서울연구원, 2012: 3). 이에 서울시는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sup>1)</sup> 특히 2012년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점은 주민교육과 마을 컨설팅이었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자치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교육과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서울시 자체적으로 총 43회에 걸쳐 공무원 4,469명과 주민 3,440명을 교육하였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총 84회에 걸쳐 일반시민 1,524명을 교육하였다(서울혁신기획관, 2013a). 서울시가 주민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는 이유는 주민참여가 지방민주주의 공고화의 관건이기 때문이다(유재원, 2003: 106).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홍보나 교육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교육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지도나 이해가 부족하여 주민참여가 저조하고 사업의 혜택이 일부 시민들에게만 국한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박현찬, 2013: 33).

이러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지도가 주민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민들의 마을공동체사업 인지도가 그 사업의 주민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2012년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해<sup>2)</sup> 서울시민들의 마을공동체 사업 인지도가 그 사업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 1.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논의

#### 1) 마을공동체 사업의 의의와 서울시 사례

마을공동체는 마을단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

1) 마을공동체 교육을 담당하는 구청공무원은 “올해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실시 첫 해인 만큼 아직 마을공동체에 대해 잘 모르는 주민이 많다”며 “효과적인 주민교육 및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민일보」, 2012).

2) 2012년 서울서베이 데이터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에 원자료(raw data)가 공개되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공동주택과 아파트 거주, 잦은 지리적 이동과 익명성의 증가는 전통적인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다(김찬동, 2012; 조정래, 2012).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주민들이 연대감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공동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찬동, 2012: 3-4).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단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개선시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사업’을 의미한다(김우영, 2013).<sup>3)</sup>

마을공동체의 회복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공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으로 주민자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김영 외, 2008: 91). 이런 의미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의제설정,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지역주민들이 기존의 정부나 기업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조정을 시도하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라고 할 수 있다(이용연·염일열, 2002: 209).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서울시의 경우 전통적인 공동체의 해체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마을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공약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제안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과 노후 저층 주거지 재개발 위주의 도시재생으로 붕괴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조정래, 2012: 3).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 3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2012년 6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였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계획수립과 실행 지원, 네트워크사업, 일꾼 발굴과 육성, 교육·홍보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로컬 거버넌스 구조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위원회,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유창복, 2013).

한편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존의 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기업-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방식의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김도희·하상근, 2013).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주도의 자치사업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그 핵심요소이다(김우영, 2013; 문석진, 2013). 이에 따라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을 ‘씨앗’ 단계로 규정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교육과 마을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주민모임 활성화, 마을활동가 양성 등 마을공동체의 토대 구축에 집중하였다(「경향신문」, 2012). 특히 서울시는 지역주민이나 담당직원들에게 생소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속하게 확산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오완석, 2013: 121-122).<sup>4)</sup>

3)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만들기라고도 불리며,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영미의 도시재생(urban revitalization, urban renewal),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NBN(Neighbors Building Neighborhood) 등이 마을공동체 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다(조정래, 2012).

4)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단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의 경우 서울시 마을공동체

## 2)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연구들은 초기에는 해외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의 성공사례를 통해 그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하거나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자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주민의 역할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 마을공동체 사례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찬호(2000)와 선정원(2004)이 대표적이다. 김찬호(2000)는 일본에서 1980년대 후기산업사회 이후 도심지재생을 위한 포괄적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합의와 소통을 위한 마을만들기 협의회, 공무원과 전문계획가의 주도 및 행정지원이 그 성공요인이었다고 한다. 선정원(2004)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유럽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NPO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분석하였다.

한편 마을공동체 사업의 유형과 성장단계별로 특성을 정리한 연구들이 있다. 김태란·인태정(2009)은 주제와 사업내용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행정주도형은 물리적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으며, 둘째, 시민단체·전문가 주도형은 소프트웨어적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주민들의 비협조로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셋째, 주민주도형은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행정과의 갈등, 전문가와의 연계부족으로 실무적인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한계를 보인다고 한다. 김영 외(2008)는 준비단계의 경우 공공행정이 중심이나 초기 단계의 경우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발전단계에서는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두드러진다고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서 그 사업을 평가하는 연구도 등장하였다. 김도희·하상균(2013)은 울산의 '지붕 없는 미술관' 신화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민관협력 거버넌스로서 성공적이라고 보나 주민은 성공적이라 평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별 마을공동체 사업 사례연구를 통해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강용배(2004)는 지역공동체 지도자들의 헌신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 발휘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기영화 외(2013)는 성미산마을 공동체의 경우 끊임없는 회의와 다양한 학습, 개인적 관심사를 해결하는 공동체 형성, 적절한 갈등관리와 재능기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신중진·정지혜(2013)는 수원 행궁동 마을만들기의 경우 종합적인 지원체계 및 마을르네상스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역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 교육 및 교류사업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여관현(2013)은 성북구 장수마을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한다.

사례분석을 통해 성공조건과 과제를 제시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용연·염일열(2002)은 주민과 행정, 전문가·시민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각 영역별로 역할분담해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는 것을 성공과제로 보았다. 진영환 외(2008)는 리더의 육성과 리더십 함양이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비전 설정, 주민참여와 주민 역량강화, 계획과 및 전문가의 역할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송인하

담당관(4명), 시 사업부서(4명), 외부의 경우 종합지원센터(4명), 전문가(4명)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지표의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추진(45점), 교육 및 홍보(35점), 주민참여(20점)이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3개구, 각 8천만원), 우수(5개구, 각 5천만원), 발전(7개구, 3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서울혁신기획관, 2013b).

(2010)는 재구조화의 조건으로 공동체구성원의 충원, 공동체 가치관의 재구조화, 지자체의 제도적 일관성, 민간조직과의 연계성을 제시하였다. 문중화·장준호(2012)는 행정체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예산지원, 법제도의 정비 등을 성공조건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마을공동체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홍진이(2013)는 주민의 자발성과 지속적 참여부족, 예산의존적 사업,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구성원의 고령화, 지원추진체계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역주민의 정주성과 정체성 확보, 주민센터의 권한 강화, 전문인력과 전담기구 확충, 관련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표 1〉 마을공동체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연구주제	연구자	연구방법	분석대상
해외사례 분석	김찬호(2000)	사례연구	일본의 마을만들기 운동
	선정원(2004)	사례연구	영국, 독일, 프랑스의 마을공동체재생
유형별 특성	김태란·인태정(2009)	사례연구	부산지역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
단계별 특징과 거버넌스 과제	김영 외(2008)	사례연구와 AHP기법	순천 마을만들기
사업 평가	김도희·하상군(2013)	설문조사	울산광역시 남구 '지붕 없는 미술관' 신화마을 조성사업
성공요인	강용배(2004)	사례연구	농촌마을공동체(홍성의 문당마을, 공주의 상서마을)
	기영화·김승현·김남숙(2013)	근거이론	성미산 지역공동체
	신중진·정지혜(2013)	사례연구	수원 행궁동 마을만들기
	여관현(2013)	사례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성공조건과 과제	이용연·염일열(2002)	사례연구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진영환·류승환·김진범(2008)	현지조사 및 면담조사	전국 22개 도시·마을만들기 지역
	송인하(2010)	사례연구	진안군 마을만들기
	문중화·장준호(2012)	설문조사	안산시 마을만들기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진이(2013)	사례연구	경기도 안성 유별난 마을,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마을기업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문중화(2012)	사례연구	한국과 일본의 마을만들기
	문석진(2013)	사례연구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오완석(2013)	사례연구	마을만들기,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시민단체의 역할	이소영(2006)	사례연구	서울시 북촌지역 사례
주민참여 영향요인	김홍순·원준혁(2013)	설문조사	서울시 마을만들기 3개 시범지역(성북구 선유골, 강북구 능안골, 강동구 서원마을)
	이지혜·이명훈·전병혜(2009)	설문조사	광주광역시 북구 8개동 주민

마을공동체 사업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들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한 문중화(2012)와 문석진(2013)을 들 수 있다. 문중화(2012)는 마을의 실

정과 특성 파악, 정보수집과 지원,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 유도를 강조하였다. 문석진(2013)은 인력지원, 칸막이행정 극복, 마을공동체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 전략적 종합계획을 강조하였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오완석(2013)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화, 각 지자체별 사업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중간조직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을 연구한 이소영(2006)은 지역문제의 이슈화와 주민의 관심 유도, 공동문제 해결과정에 대한 학습, 다양한 이해집단과 관련단체 간의 이견 조율을 강조하였다.

마을공동체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들을 연구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 2. 주민참여에 관한 논의

### 1) 주민참여의 의의

주민참여란 공적인 의사결정에 자신의 의사를 투영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Creighton, 2005; 김혜정, 2012). 이러한 주민참여의 유형은 그 분류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Verba와 Nie(1972)는 주민참여 유형으로 투표참여, 선거운동, 공직자접촉, 지역공동체 활동(local activity participation)과 비제도적 참여인 청원, 데모, 보이콧 등을 제시하고 있다(김혜정, 2012). 투표나 선거운동 등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 직접 민주주의 또는 숙의민주주의 하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활동에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 2) 주민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논의

주민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Cary(1970: 146)는 참여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결정능력 및 행동력을 주민참여의 결정요인으로 보았다(김익식, 2003: 51; 전용식, 2008: 67). Kenny(1993)는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정치효능감이나 정치적 관심 등 심리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혜정, 2012: 216).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사회자본이나 네트워크 등 사회 관련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Marschall, 2004).

우선 개인 관련 요인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경제적 변인이 중시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에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가구원 수나 학령아동 유무, 거주기간, 지역애착, 이념성향 등이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적 변인들 중에는 교육, 소득, 직업, 주택소유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Koehler & Koontz, 2008: 144).

성별의 경우 남성이 참여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한다(Curtis, Grabb, & Baer, 1992; Schlozman et al., 1994: 963; 김혜정, 2012). 그러나 Conway와 Hachen(2005)는 지역에서 더 많이 생활하는 여성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기 때문에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분석하였다(김홍순·원준혁, 2013: 97).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분석(Verba & Nie, 1972; Dalton, 2008)이 있으나, Lall과 그의 동료들(2004)은 연령과 참여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결혼의 경우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참여에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Hodgkinson & Weitzman, 1992)와 이혼이나 별거 중인 사람이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Williams & Ortega, 1986)가 있다. 가구원 수의 경우 가족 수가 작을수록 참여에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Edwards & White, 1980)와 학령아동이 있는 경우 참여에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Berger, 1991)도 있다. 거주기간의 경우 대부분 거주기간이 길수록 참여가 늘어난다고 하나(Berger, 1991; Conway & Hachen, 2005), 거주기간 6년까지는 참여가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낮아진다는 분석도 있다(Oropesa, 1992).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사회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연대감인 지역애착도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김보경, 2013). 한편 이념성향도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에 비해 참여에 소극적이라고 한다(Claibourn & Martin, 2000).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참여 수준도 영향을 받는다(Verba & Nie, 1972; 김홍순·원준혁, 2013: 97-99). 우선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원이 많아져 참여가 높아진다(Hodgkinson & Weitzman, 1992).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기술과 자원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참여를 한다(Curtis, Grabb, & Baer, 1992; Nie, Junn, & Stehlik-Barry, 1995; Dalton, 2008). 직업에 있어서는 전일제 근무자(full-time workers)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연구(Curtis, Grabb, & Baer, 1992)와 시간제 근무자(part-time workers)가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Hodgkinson & Weitzman, 1992)가 있다. 주택소유 여부의 경우 자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분석이 있으나(Olsen et al., 1989; Lall et al., 2004), Conway와 Hachen(2005)은 자가소유자보다는 공동주택 임차인이 참여도가 높다고 보았다(김홍순·원준혁, 2013: 98).

사회자본과 네트워크 같은 사회관련 변인도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친다(Booth & Richard 2001; 송경재, 2013; 전용식, 2008; 한상일, 2006). Putnam(1995)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공동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동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들이다. 여기에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 자발적 결사체 참여, 자원봉사나 기부 활동 등이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신뢰가 참여를 촉진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지지되어 왔다(Verba & Nie, 1972; Putnam et al., 2000).<sup>5)</sup>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인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Kaufman, 1999; 박희봉 외, 2003). 정부신뢰가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도적인 참여의 경우 정부를 신뢰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Reef & Knoke, 1999), 비제도적인 참여의 경우 정부신뢰가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송경재, 2013: 235).

한편 자발적 결사체 가입도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발적 결사체 회원인 경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Verba & Nie, 1972; Peterson, 1992). 사회조직이나 기관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과

5) 신뢰를 이웃에 대한 신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로 구성되는 것으로 측정하여 주민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연구도 있다(하정봉·길종백, 2013).

접촉을 많이 한 개인은 참여에 필요한 사회규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Marshall, 2004: 234). 미국 로스앤젤리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지역 내 네트워크의 가입이 지역공동체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상일, 2006: 53-54). 사회조직뿐만 아니라 정당과 같은 정치조직에 가입한 경우도 참여에 적극적이라고 한다(Burn & Konrad, 1987). 그리고 자원봉사(volunteering)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참여에 더 적극적이며(Chambré, 1987), 기부(charitable giving) 경험 역시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Berger, 1991; Hodgkinson & Weitzman, 1992). 이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 가입이나 사회활동 참여 경험은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Newton, 2001: 206), 참여를 증진시키는 작용을 한다(Dalton, 2008: 62; 김혜정, 2012 재인용).

마을공동체의 주민참여를 분석한 국내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홍순·원준혁(2013)은 서울시 마을만들기 3개 시범지역의 주민참여에 연령과 소득, 지역에 대한 애착이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고 보았다. 한편 이지혜 외(2009)는 광주광역시 북구 8개동의 경우 지역애착, 마을만들기 사업평가, 행정지원만족도, 현상인식, 참여경험 등이 주민참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3. 정책인지도와 주민참여에 관한 논의

정책인지도는 정책이해도 혹은 정책리터러시(policy literacy)라고도 불린다. 그 개념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 정책인지도는 협의로 ‘정책과정과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반면 최광의로는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토대로 정책의 개인적, 사회적 파급력까지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광호, 2008; 임도빈 외, 2012).

참여에 필요한 역량은 정보를 얼마나 잘 습득하고 가공하느냐 하는 능력으로부터 시작된다(Dalton, 2008: 19; 류영아, 2013: 319). 정책과 관련된 복잡한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정책인지도는 참여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임도빈 외, 2012). 관련정보나 지식이 주민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Kaid et al., 2007: 1193-1194; 류영아, 2013 재인용). 정책 이슈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시민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다(Webler et al., 2003: 107). 즉 정책인지도는 정책과정의 참여를 결정짓는 기본조건이라 의의를 지니고 있다(배귀희·임승후, 2009: 1428). 최근 정책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는 참여적 정책분석, 공론조사, 시민배심원 등이 늘고 있다. 이러한 기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정책인지도가 있어야 가능하다(Fishkin, 2003; 임도빈 외, 2012). 정책과정에서 그 쟁점(issue)이나 의제(agenda)에 대해 알고 있어야 공익 또는 사익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책인지도가 떨어지면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참여기회 자체가 박탈되기도 한다(임도빈 외, 2012).

그리고 정책인지도나 정책관련 지식이 풍부할수록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다(정광호, 2008). 또한 정책인지도나 지식이 높을수록 정책과정이나 참여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보



다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Delli Carpini & Keeter, 1996; 정광호, 2008).

정책관련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제대로 참여할 수 없다(Diduck & Sinclair, 2002; Stinchcombe & Gibson, 2001). 즉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및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은 개인들이 공적인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인 기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참여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Richardson & Razzaque, 2006: 166). 따라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정보, 그리고 그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주민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Akoh, 2011: 7).

정책인지도와 주민참여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Blinder와 Krueger(2004)는 미국 사회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주민참여를 더 많이 하며,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한다(정광호, 2008). Keogh(1990)는 지역관광개발 정보의 인지도가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전용식, 2008 재인용).

#### 4.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인적 특성 변인과 지역사회와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해 왔다. 또한 마을공동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개 성공사례를 분석하는 일화적(anecdotal)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일부 연구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참여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주목하여 왔다. 그러나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주민참여의 필수요소로 알려져 있는 정책인지도를 고려한 실증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인지할 경우 이것이 실제 주민참여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민들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처음 들어 본다’라는 낮은 수준, ‘명칭은 들어보았다’라는 중간 수준, 그리고 ‘잘 알고 있다’라는 높은 수준 등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정책인지도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의 참여요인에 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기초로 분석한 증거기반(evidence-based) 연구라는 점이다(Birkland, 2011: 294).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몇몇 사례들을 중심으로 일화적 연구를 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2012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분석이다. 둘째, 본 연구는 확률표본추출과 표본 수(sample size)를 충분히 확보하여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비확률표본추출을 사용하고 표본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층화2단 집락추출을 통해 49,758명의 표본을 추출한 「2012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 Ⅲ. 연구모형 및 방법

#### 1. 연구의 가설과 분석모형

##### 1) 본 연구의 가설과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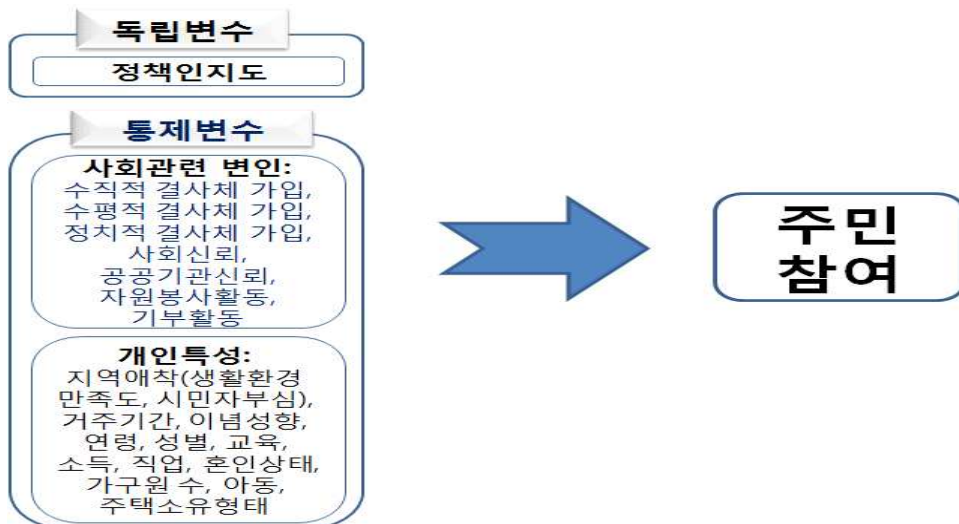
###### (1) 본 연구의 가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구의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면 주민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주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서울시복지재단, 2012). 즉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주민들의 정책인지도가 높아지면 마을공동체에 대한 주민참여가 높아진다는 것이다(민현정·김행희, 2012).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홍보나 교육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모호한 사업내용과 부실한 사후관리로 특정 집단이 독식하는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이지현, 2013). 특히 지난 1년간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저조하다고 한다(박현찬, 2013: 33). 이와 같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책인지도 상승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정책인지도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본 연구의 분석틀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참여에 대한 정책인지도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주민참여”이며, 독립변수는 “정책인지도”이다. 그리고 통제변수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사회관련 변인과 개인적 특성을 설정하였다. 우선 “사회관련 변인”으로는 수직적 결사체, 수평적 결사체, 정치적 결사체 참여여부, 사회신뢰, 공공기관신뢰,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개인특성”으로 지역애착인 생활환경만족도와 시민 자부심, 거주기간, 이념성향, 연령, 성별, 교육, 소득, 직업, 혼인상태, 가구원 수, 아동유무, 주택소유 형태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 2) 연구모형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모형을 설정하고 통상최소사승추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text{모형} \quad CP = & \alpha + \beta_1 PL + \beta_2 VG + \beta_3 HG + \beta_4 PG + \beta_5 ST + \beta_6 GT + \beta_7 VO \\ & + \beta_8 DO + \beta_9 RS + \beta_{10} PR + \beta_{11} ID + \beta_{12} RL + \beta_{13} AG + \beta_{14} SE \\ & + \beta_{15} ED + \beta_{16} IN + \beta_{17} FJ + \beta_{18} PJ + \beta_{19} MA + \beta_{20} DV + \beta_{21} DI \\ & + \beta_{22} FN + \beta_{23} CH + \beta_{24} LR + \beta_{25} SR + \epsilon \end{aligned}$$

여기서, CP=주민참여, PL=정책인지도더미, VG=수직적 결사체 참여더미,  
 HG=수평적 결사체 참여더미, PG=정치적 결사체 참여더미,  
 ST=사회신뢰, GT=공공기관신뢰, VO=자원봉사활동더미,  
 DO=기부활동더미, RS=생활환경만족도, PR=시민 자부심,  
 ID=이념성향, RL=거주기간, AG=연령, SE=성별더미, ED=교육,  
 IN=소득, FJ=정규직더미, PJ=비정규직더미, MA=기혼더미,  
 DV=이혼/별거더미, DI=사별더미, FN=가구원 수, CH=아동더미,  
 LR=전세더미, SR=월세더미,  $\alpha$ =상수항,  $\epsilon$ =오차항

## 2. 데이터의 출처와 변수의 조작적 정의

### 1) 2012 서울서베이 데이터

지난 2003년부터 서울시는 서울의 인구구조 및 특성을 분석해 시정운영과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이재완, 2013: 199). 「2012 서울서베이」는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층화군집 추출을 통해 서울시내 2만 가구, 15세 이상 49,758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가구주의 경우  $\pm 0.69\%$ p, 가구원의 경우  $\pm 0.46\%$ p이다(서울특별시, 2013).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데

이터와 가구원 데이터를 결합(merge)하여 활용하였다.

2012년 처음 조사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는 29.9%(‘잘 알고 있다’ 3.9%+‘명칭만 들어 보았다’ 26.0%), ‘마을공동체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8.1%였다(서울특별시, 2013).

## 2) 주요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

### (1) 종속변수의 측정: 정책인지도

본 연구에서의 정책인지도는 「2012 서울서베이」의 “귀하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그 응답카테고리인 “①잘 알고 있다, ②명칭 정도만 들어보았다, ③처음 들어 본다”에 대한 선택을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측정하였다. ‘처음 들어 본다’를 ‘낮음’(기준, 0값)으로, ‘명칭 정도만 들어보았다’를 ‘중간’, ‘잘 알고 있다’를 정책인지도 ‘높음’으로 처리하였다.

### (2) 독립변수의 측정: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정책에 대한 참여는 「2012 서울서베이」의 “나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 통제변수의 측정

#### ① 사회관련 변인의 측정

먼저 수직적, 수평적, 정치적 결사체 참여여부는 「2012 서울서베이」문항 중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류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sup>6)</sup> 수직적 결사체 참여는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단체에 참여하는 것으로(박희봉 외, 2003; 이재완, 2013: 201), 응답카테고리 중 ‘동창회/동창모임,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의 선택으로 측정하였다.

수평적 결사체 참여여부는 특별한 연고 없이 누구에게나 가입과 참여가 개방되어 있는 단체에 참여하는 것으로(박희봉 외, 2003; 이재완, 2013: 201), 응답카테고리 중 ‘친목회/친목계,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동호회, 자원봉사단체, 시민운동단체, 노조 및 직능 단체, 종교단체, 기타’의 선택으로 측정하였다.

정치적 결사체의 참여여부는 정치활동을 위한 단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카테고리 중 “정당”을 선택한 경우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사회신뢰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속한 사회공동체의 다른 사람을 믿는 정도로 일반화된 신뢰를 의미한다. 즉 신뢰주체와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의 생활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웃, 처음 만나는 사람,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신뢰로 조작화하였다.<sup>7)</sup> 그 측정은 「2012 서울서베이」의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고 질문의 항목 중 “1) 이웃,

6) 수직적, 수평적, 정치적 결사체의 참여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기준(reference)은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라는 비참여(=0)로 설정하였다.

2) 처음 만난 사람, 3)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신뢰”에 동의하는 정도로 하였다. 그 응답카테고리는 “매우 신뢰(5점)-약간 신뢰(4점)-보통(3점)-별로 신뢰 안함(2점)-전혀 신뢰 안함(1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신뢰는 위 3개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점수를 모두 합한 후 3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sup>8)</sup>

공공기관신뢰는 「2012 서울서베이」가구원 설문에서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항목 중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공기관신뢰가 높다.

자원봉사활동은 「2012 서울서베이」문항 중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에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를 0, 참여경험 있는 경우를 1로 측정하였다.

기부활동은 「2012 서울서베이」문항 중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기부한 적이 없다’를 기준(0값)으로 하고, 그 외 형태로 ‘있는 경우’를 1값으로 측정하였다.

## ② 개인적 특성 변인의 측정

지역애착은 지역사회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느낌으로(김보경, 2013),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생활환경만족도와 시민 자부심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생활환경만족도는 「2012 서울서베이」가구주 설문에서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귀하의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의 항목인 “1)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2)경제환경(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3)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4)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에 동의하는 정도로 조작화하였다. 그 응답카테고리는 매우 불만족(1점)-약간 불만족(2점)-보통이다(3점)-약간 만족(4점)-매우 만족(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네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을 합산한 후 그 평균값으로 ‘생활환경만족도’로 측정하였다.<sup>9)</sup> 시민 자부심은 「2012 서울서베이」문항 중 “귀하는 서울시민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한 점수로 측정하였다(이재완, 2013: 201). 그 응답카테고리는 ①20점 이하, ②21~40점, ③41~60점, ④61~80점, ⑤81~100점이다.

거주기간은 응답자가 현재 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연 단위로 측정하였다.

이념성향은 「2012 서울서베이」가구원 설문 중 “아래 각 항목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의 항목인 “1)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2)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

7) 가족에 대한 신뢰는 혈연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본 연구의 사회신뢰에서 제외하였다.

8) 사회신뢰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는 0.7571이었다.

9) 생활환경만족도의 Cronbach's  $\alpha$  는 0.7231로 나타났다.

선이 필요하다”에 동의하는 정도로 조작화하였다. 그 응답카테고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별로 그렇지 않다(2점)-보통이다(3점)-약간 그렇다(4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이다. 네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을 합산한 후 그 평균값으로 ‘이념성향’으로 측정하였으며, 따라서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인 반면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이다(이재완, 2013: 202).<sup>10)</sup>

연령은 응답자의 실제 나이로 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대 이상으로 분류한 후 그 응답점수로 측정하였고, 성별은 여성을 기준(=0)으로 측정하였다.

교육은 최종졸업 학력을 기준으로 ①중졸 이하, ②고졸 이하, ③전문대 이하, ④대학교 이하, ⑤대학원 이상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소득은 1년 동안의 가구 월평균 소득(세전소득)으로 ①100만원 미만, ②100~200만원 미만, ③200~300만원 미만, ④300~400만원 미만, ⑤400~500만원 미만, ⑥5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한 후 그 응답점수로 측정하였다(이재완, 2013).

직업의 경우는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무직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는데, 전일제 근무를 할 경우 정규직, 시간제나 기타 형태로 근무할 경우 비정규직, 그리고 직업이 없는 경우(주부, 학생 포함)를 무직(기준)이다(이재완, 2013).

혼인상태는 응답자의 혼인상태에 관한 질문으로, 그 응답카테고리는 ①미혼, ②기혼, ③이혼/별거, ④사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을 기준(=0)으로 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가구원 수는 응답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로 측정하였다. 아동 유무는 “귀택에 현재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없음을 기준(=0)으로, 있음을 1값으로 측정하였다.

주택소유형태는 응답자의 주거점유형태로 자가를 기준(=0)으로 하여 전세와 월세를 각각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문항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본 연구의 변수와 측정

영역	변수	설문문항	측정
종속 변수	주민참여	나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독립 변수	정책 인지도	귀하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①처음 들어 본다(기준), ①명칭 정도만 들보았다, ②잘 알고 있다 더미
사회 관련 변인	수직적 결사체 참여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에 ‘동창회/동창모임,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를 선택한 경우	참여=1, 비참여=0
	수평적 결사체 참여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에 ‘친목회/친목계,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동호회, 자원봉사단체, 시민운동단체, 노조 및 직능 단체, 종교단체, 기타’를 선택한 경우	참여=1, 비참여=0
	정치적 결사체 참여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에 ‘정당’을 선택한 경우	참여=1, 비참여=0

10) 이념성향의 Cronbach's  $\alpha$  는 0.4754로 다소 나타났다.

사회신뢰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이웃, 2)처음 만난 사람, 3)다른 나라 사람	매우 신뢰(5점)... 전혀 신뢰 안함(1점), 3개 항목의 응답점수의 합÷3
공공기관신뢰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공공기관	매우 신뢰(5점)... 전혀 신뢰 안함(1점)
자원봉사활동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0), 있다(=1)
기부활동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이었습니다? 기부한 적 없습니까?	기부한 적 없다(=0), 있다(=1)
지역 애 착	생활 환경 만족도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2)경제환경(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3)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4)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매우 만족(5점)... 매우 불만족(1점), 4개 항목의 응답점수의 합÷4
	시민 자부심	귀하는 서울시민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①20점 이하 ... ⑤81-100점
거주기간		현재 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	단위: 년
개인 관련 변인	이념성향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1)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 없다, 2)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4개 항목의 응답점수의 합÷4
	연령	응답자의 나이	①10대 ... ⑥60대 이상
	성별	응답자의 성별	남성=1, 여성=0
	교육	응답자의 최종 학력	①중졸 이하 ... ⑤대학원 이상
	소득	1년 동안의 가구 월평균 소득(세전소득)	①100만원 미만 ... ⑥500만원 이상
	직업	정규직(전일제), 비정규직(시간제, 기타), 무직(기준)	해당(=1), 비해당(=0)
	혼인상태	귀하의 혼인상태는?	①미혼, ②기혼, ③이혼/별거, ④사별
	가구원 수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	단위: 명
	아동	귀댁에 현재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없다(=0), 있다(=1)
	주택소유	주거점유형태	①자가, ①전세, ②월세 더미

## IV. 분석의 결과

### 1. 응답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 1) 응답자의 주요 특성

응답자들의 주요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51.70%로 남성

48.30%보다 많다. 연령 분포에서 40대가 24.18%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9.42%, 30대 18.12%, 60대 이상이 15.06%, 20대 14.94%, 10대 8.28%였다. 교육의 경우 고졸이 33.13%, 대학교 이상 27.97%, 전문대 이하 20.94%, 중졸 이하 16.82%, 대학원 이상 1.14% 순이었다.

직업의 경우 정규직이 53.40%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무직이 41.72%, 비정규직이 4.88%였다. 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30.25%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원이 25.79%, 400~500만원이 25.62%, 200~300만원이 11.69%, 100~200만원이 5.37%, 100만원 이하가 1.28%였다.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이 65.49%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미혼 27.36%, 사별 4.34%, 이혼/별거 2.80%였다. 아동유무의 경우 없음이 89.95%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있음이 10.05%였다. 주택소유형태의 경우 자가 55.36%, 전세 40.55%, 월세 4.09%였다.

수직적 결사체의 가입이 52.90%, 미가입이 47.10%였고, 수평적 결사체의 경우 가입이 63.20%, 미가입이 36.80%였으며, 정치적 결사체의 경우 가입이 0.26%, 미가입이 99.74%였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없음이 75.06%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있음은 24.94%였다. 기부활동의 경우 없음이 60.91, 있음이 39.09%였다.

〈표 3〉 응답자의 주요 특성 분포

변수	범주	빈도(비율 %)	변수	범주	빈도(비율 %)
성별	여성	25,724(51.70)	교육	중졸 이하	8,371(16.82)
	남성	24,034(48.30)		고졸 이하	16,483(33.13)
연령	10대	4,118(8.28)	직업	전문대 이하	10,419(20.94)
	20대	7,436(14.94)		대학교 이상	13,917(27.97)
	30대	9,018(18.12)		대학원 이상	568(1.14)
	40대	12,030(24.18)		정규직	26,569(53.40)
	50대	9,664(19.42)		비정규직	2,429(4.88)
	60대 이상	7,492(15.06)		무직	20,760(41.72)
소득	100만원 이하	638(1.28)	혼인 상태	미혼	13,616(27.36)
	100~200만원	2,671(5.37)		기혼	32,586(65.49)
	200~300만원	5,815(11.69)		이혼/별거	1,395(2.80)
	300~400만원	12,831(25.79)		사별	42,161(4.34)
	400~500만원	12,749(25.62)	아동 유무	무	44,759(89.95)
	500만원 이상	15,054(30.25)		유	4,999(10.05)
주택 소유 형태	자가	27,545(55.36)	수직적 결사체	미가입	23,435(47.10)
	전세	20,179(40.55)		가입	26,323(52.90)
	월세	2,034(4.09)	정치적 결사체	미가입	49,627(99.74)
수평적 결사체	미가입	18,312(36.80)		가입	131(0.26)
	가입	31,446(63.20)	기부 활동	무	30,310(60.91)
자원 봉사		무		37,350(75.06)	유
	유	12,408(24.94)			



##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표 4〉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주민참여	49,758	2.805	0.912	1	5
정책인지도	49,758	1.359	0.560	1	3
사회신뢰	49,758	2.598	0.702	1	5
공공기관신뢰	49,758	3.094	0.878	1	5
생활만족도	49,758	3.319	0.575	1	5
시민자부심	49,758	3.997	0.701	1	5
거주기간(년)	49,758	7.424	6.358	0	83
이념성향	49,758	3.272	0.557	1	5
가구원 수(명)	49,758	3.327	0.994	1	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4>와 같다. 주민참여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805로 중간수준보다 높았으며, 정책인지도의 평균은 3점 만점에 1.359로 중간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사회신뢰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598, 공공기관신뢰의 평균은 3.094로 다소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와 시민자부심의 평균은 5점 만점에 각각 3.319, 3.99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거주기간의 평균은 7.424년이었으며, 가구원 수는 3.327명이었다. 이념성향의 평균은 3.327로 전체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분석결과

### 1) 정책인지도에 따른 주민참여 차이분석

정책인지도에 따른 주민참여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ANOVA 분석결과, 정책인지도가 낮은 ‘처음 들어본다’의 경우 주민참여의 평균은 2.671이었으며, 중간 수준인 ‘명칭 정도만 들어보았다’의 경우 주민참여 평균은 3.017, 높은 수준인 ‘잘 알고 있다’의 경우 주민참여 평균은 3.589였다. 따라서 정책인지도가 높은 경우 더 높은 주민참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Scheffe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정책인지도가 낮은 경우, 중간, 높은 경우의 주민참여는 각각 서로 다른 집단으로 묶였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정책인지도에 따른 주민참여

정책인지도	빈도	주민참여	
		평균	표준편차
처음 들어 본다 (낮음)	33,971	2.671 <sup>a</sup>	0.903
명칭 정도만 들어보았다 (중간)	13,702	3.017 <sup>b</sup>	0.825
잘 알고 있다 (높음)	2,085	3.589 <sup>c</sup>	0.940
F-값		1602.95***	

주: \* p<0.1, \*\* p<0.05, \*\*\* p<0.01, 사후분석(Scheffe): a<b<c.

## 2)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주민참여와의 상관관계를 보면,<sup>11)</sup> 정책인지도(연속형으로 측정된 경우)가 0.243을 나타냈으며, 이념성향이 0.11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신뢰 0.086, 시민자부심 0.077, 생활만족도 0.075, 공공기관신뢰 0.056 순이었다.<sup>12)</sup>

그러나 단순 상관관계 분석은 혼란변수들(confounding variables)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의 분석이므로 진정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혼란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책인지도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모형에서 독립변수인 정책인지도는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인지도가 낮은 ‘처음 들어 본다’에 비해 정책인지도가 중간인 ‘명칭만 들어보았다’의 경우 주민참여가 증가하였고, 정책인지도가 높은 ‘잘 알고 있다’의 경우도 주민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인지도가 낮은 경우와 중간인 경우 간의 주민참여의 차이는 0.297이며, 정책인지도가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 간의 차이는 0.849로 나타났다. 정책인지도가 중간인 경우와 높은 경우 간의 주민참여의 차이는 0.552였다. 다른 혼란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ANOVA 분석결과와 같이 정책인지도가 높은 경우 주민참여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iduck & Sninclair(2002)가 주장한 정책과 관련된 기술적인 이슈나 정책의제(agenda)에 대한 이해가 풍부할수록 주민참여가 촉진된다는 명제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즉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참여동기가 높고(정광호, 2008), 그 지원내용이나 참여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Delli Carpini & Keeter, 1996;

11) 주요 연속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부록에 나타나 있다.

12) 한편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계산한 결과, 전체 설명변수들의 평균 VIF는 1.41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광호, 2008). 마을공동체 사업의 집행과 평가단계의 쟁점이나 의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 잘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의사를 투영하기 쉽고 사업에 참여하기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초기 단계에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홍보나 교육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나아가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일반시민들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그 사업의 신청자격과 절차, 지원내용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사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필수요소인 것이다.

한편 통제변수들 중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들이 있다. 우선 직업의 경우 무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주민참여에 소극적이었으나, 정규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odgkinson과 Weitzman(1992)의 연구결과와 다른 것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참여를 위한 여유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더 소극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정치적 결사체 가입은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Burn과 Konrad(1987)의 주장한 정당 가입이 참여를 촉진한다는 것과 상반된다. 이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특정정치세력을 위한 것이라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한 경우는 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부분의 통제변수들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우선 자발적 결사체 참여를 의미하는 수직적 결사체 가입과 수평적 결사체 가입은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회조직에의 가입 경험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사회규범을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Marshall, 2004: 234).

사회신뢰와 공공기관신뢰도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신뢰가 주민참여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고전적 명제와 일치하는 결과이다(Verba & Nie, 1972).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Kaufman, 1999; 박희봉 외, 2003). 또한 공공기관을 신뢰할수록 지방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역공동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Reef & Knoke, 1999).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 역시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자원봉사와 기부활동 경험자가 그 경험이 없는 자들보다 참여에 더 적극적이라는 주장(Hodgkinson & Weitzman, 1992; Chambrè, 1987)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희생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유대가 강하여 공동체 참여를 촉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Newton, 2001: 206; Dalton, 2008: 62; 김혜정, 2012).

지역애착을 나타내는 생활환경만족도와 시민자부심도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 천안시와 공주시 및 태안군과 예산군의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사를 분석한 정하용(2007) 및 서울 구시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의 주민참여를 분석한 김동근(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거주기간의 경우도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증가하여 주민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Olsen et al., 1989; Conway & Hachen, 2005; 김홍순·원준혁, 2013).

이념성향의 경우 진보적일수록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일수록 사회관계 속에서 호혜성을 보다 더 많이 배태시키고(박통희, 2010),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연령은 Lal와 그의 동료들(2004)의 연구와 같이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주민참여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eta)	t	
			B	표준오차			
독립 변수	정책 인지도	낮음	0.297***	0.009	0.145	32.91	
		높음	0.849***	0.020	0.187	42.79	
통제 변수	사회 자본	수직적 결사체	0.057***	0.008	0.031	6.72	
		수평적 결사체	0.060***	0.009	0.032	7.06	
		정치적 결사체	-0.210***	0.076	-0.012	-2.76	
		사회신뢰	0.080***	0.006	0.062	13.81	
		공공기관신뢰	0.018***	0.005	0.017	3.80	
		자원봉사활동	0.027***	0.010	0.013	2.80	
		기부활동	0.108***	0.009	0.058	12.72	
	지역 애착	생활만족도	0.069***	0.007	0.044	9.80	
		시민자부심	0.061***	0.006	0.047	10.69	
	거주기간		0.009***	0.001	0.061	13.22	
	이념성향		0.141***	0.007	0.086	19.79	
	연령		-0.007	0.005	-0.011	-1.44	
	성별		-0.043***	0.009	-0.024	-5.07	
	교육		-0.005	0.004	-0.006	-1.27	
	소득		-0.013***	0.004	-0.018	-3.37	
	직업	정규직	0.010	0.014	0.003	0.66	
		비정규직	-0.014***	0.005	-0.015	-2.87	
	혼인 상태	기혼	0.055***	0.015	0.029	3.66	
		이혼/별거	0.005	0.028	0.001	0.19	
		사별	-0.081***	0.027	-0.018	-3.06	
	가구원수		-0.007	0.010	-0.004	-0.74	
	아동		0.019	0.019	0.005	1.03	
	주택 소유	전세	0.042***	0.009	0.022	4.73	
		월세	0.132***	0.021	0.029	6.32	
	절편			1.418	0.045	-	31.39
	관측치			49,758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			0.0954 (0.0950)			
F-test			201.78***				

주: \* p<0.1, \*\* p<0.05, \*\*\* p<0.01

성별의 경우 부(-)의 영향을 나타내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민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홍순·원준혁(2013: 102)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더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Olsen et al., 1989; Conway & Hachen, 2005).

교육은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학력이 지역개발 참여의사와 무관하다는 정하용(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소득은 주민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LA 광역권 주민들의 마을조직 참여를 분석한 Musso와 그의 동료들(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성격을 띠는데, 고소득층의 경우 이런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가능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Musso et al., 2001: 21).

혼인상태에서 미혼에 비해 기혼자의 경우가 주민참여에 적극적이며, 사별의 경우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혼/별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구원 수는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아동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주택소유 형태의 경우 자가에 비해 전세와 월세가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Musso와 그의 동료들(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소유주택이라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높은 경우는 자산소득이 높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김홍순·원준혁, 2013). 따라서 자산소득이 높은 자가소유자의 경우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라는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 구입할 가능성이 커서 주민참여가 저조한 것이다(Musso et al., 2001).

## V. 결론: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시민들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책인지도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정책인지도에 따른 주민참여의 차이를 ANOVA 분석한 결과, 정책인지도가 높으면 주민참여의 평균값도 높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른 혼란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책인지도는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정책인지도가 낮은 ‘처음 들어 본다’에 비해 정책인지도가 중간인 ‘명칭만 들어보았다’의 경우 주민참여가 높아졌고, 정책인지도가 높은 ‘잘 알고 있다’의 경우도 주민참여가 더 높아졌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사업시행 초기인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특정집단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활발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책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일반시민들의 정책인지도가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전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주민참여의 폭과 깊이를 기준으로 일본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진 워크숍(workshop)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김영 외, 2008: 106). 공청회의 경우

주민참여에 깊은 영향을 주지만 폭이 좁고, 시민 대상 설문이나 홍보는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만 참여의 깊이를 담보할 수는 없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워크숍은 개별 주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 있고, 참여자들 간의 인식공유와 신뢰형성에 적합하기 때문이다(김영 외, 2008).

또한 정책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에서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욕구과악 단계에서부터 포괄적인 지역의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마을공동체 사업에 활용하는 영국의 마을감정조사(Village Appraisal)와 같은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中島惠理, 2009: 163-166).

한편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지식교육과 현장 경험을 접목한 서비스러닝(service-learning)이 필요하다. 즉 풀뿌리 자치조직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이론과 실재를 결합하여 주민 스스로 실무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이승중·김혜정, 2011: 201). 교육방식의 경우도 정책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의 강의학습보다는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토의학습의 비중을 높이고, 점차 연습을 통한 학습(learning by practicing)과 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매체의 경우 PC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을 기초로 일본의 ‘도시계획포럼(FCITY)’ 같은 온라인에서 학습과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渡邊俊一, 2004: 168-171). 교육기관의 경우 시나 자치구 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시민단체나 지역대학 등으로 다원화해야 하며,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생활밀착형의 작은도서관과 연계하여 교육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김재철, 2013).

마을공동체 사업은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정책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자치구의 교육과 홍보활동 평가의 경우 평가단 구성에서 외부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의 비중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지표의 경우도 실제로 교육 및 홍보가 주민참여로 연결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특히 교육 및 홍보 평가항목에서 공무원교육보다 주민교육과 홍보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인센티브 부여에서도 그 대상 자치구 숫자를 줄이고 금액을 늘려 실제적인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책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교육이나 홍보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시 교육 이수자를 우대하고 선정 후 기본교육을 면제시켜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표와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신청 및 지원과 관련 용어도 일반시민들이 알기 쉬운 평이한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개념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도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한국일보」, 2012). 교육이나 홍보보다 어려운 전문용어나 행정용어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도 순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목표의 명확화와 용어의 순화, 주민참여의 폭과 깊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워크숍의 활용, 교육방식과 기관 및 매체, 상시적인 홍보 활동이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기업 육성, 복리증진,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그 유형에 따라 정책인지도와 주민참여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집단의 특성이나 지역사회의 환경 변인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일부 변수들에 대한 단일조작화(mono-operation)의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신뢰, 시민자부심 등을 하나의 문항으로 묻고 있어 구성개념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그 마을공동체 집단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환경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모형을 통해 정책인지도가 실제 주민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용배. (2004). 농촌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 사례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4): 5-26.
- 「경향신문」. (2012).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동 걸렸다. 5.22.
- 기영화·김승현·김남숙. (2013). 성미산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웰빙의 패러다임 모형분석: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한국행정학보」, 47(1): 295-320.
- 김도희·하상근. (2013). 울산광역시 남구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추진실태분석에 따른 성공요인과 정책적 효과분석: 지역재생을 위한 ‘지붕 없는 미술관’ 신화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3): 93-123.
- 김동근. (2011).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분석. 「국토계획」, 46(3): 5-17.
- 김보경. (2013). 컨벤션개최지 지역주민의 지역애착이 주민참여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12(2): 157-172.
- 김영·이필용·김남용·정규식. (2008).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1(3): 87-108.
- 김우영. (2013). 은평구 마을공동체로 바라보는 주민참여 사업. 「공공사회연구」, 3(2): 5-35.
- 김익식. (2003). 지방자치행정에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참여제도와 의식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7(1): 45-72.
- 김재철. (2013). 마을공동체 구심체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Focus광주」, 2013-06. 광주발전연구원.
- 김찬동. (2012). 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찬호. (2000). 일본의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의 전개와 주민 참여. 「도시행정학보」, 13(1): 95-115.
- 김태란·인태정. (2009). 부산지역의 마을만들기 유형과 특성: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1(1): 145-169.
- 김혜정. (2012).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6(2): 213-240.
- 김홍순·원준혁. (2013). 주민참여 및 인식도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특성에 대한 고찰: 서울시 마을 만들기 3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서울도시연구」, 14(1): 93-111.
- 류영아. (2013). 시민참여 활성화 영향요인 연구: 지역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2): 317-338.
- 문석진. (2013).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공사회연구」, 3(2): 36-48.
- 문종화. (2012). 마을만들기 사례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연구」, 37(1): 21-31.

- 문중화·장준호. (201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연구: 안산시 마을만들기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연구」, 37(1): 75-87.
- 민현정·김행희. (2012). 전국 마을만들기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Focus 광주. 2012-04. 광주발전연구원.
- 박통희. (2010). 대인신뢰에 대한 가치관과 단체참여의 영향: 어떤 가치관과 단체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배태 시키나? 「한국행정학보」, 44(1): 67-97.
- 박현찬. (2013). 마을공동체사업, 성과와 비판, 그리고 발전과제. 「마을공동체 1년 시민토론회 자료집」. pp.32-34.
-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6.
- 배귀희·임승후. (2009). 정부신뢰가 공식적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1(4): 1421-1447.
- 서울시복지재단. (2012).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연구고보서 2012-34.
- 서울연구원. (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연구 용역 보고서.
- 서울특별시. (2013). 보도자료: 2012, 서울시민의 삶의 질, 생활상과 가치관은? 6.17.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516호, 2013.8.1., 일부개정.
- 서울혁신기획관. (2013a). 2013년도 마을공동체 교육계획.
- \_\_\_\_\_. (2013b).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세부 추진계획.
- 선정원. (2004).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 생존배리어론의 재조명. 「행정법연구」, 12: 311-342.
-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 관습적·비관습적 참여와 사회적 자본. 「한국정당학회보」, 12(2): 221-244.
- 송인하. (2010). 마을공동체운동의 성공조건과 과제. 「지방자치연구」,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4: 33-64.
- 「시민일보」. (2012). 구로구, 마을공동체 ‘기초다지기’ 릴레이교육. 6.24.
- 신중진·정지혜. (2013).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 수원화성과 행궁동 사람들의 도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6(4): 59-96.
- 여관현. (2013).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6(1): 53-87.
- 오완석. (2013). 마을공동체회복사업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공사회연구」, 3(2): 104-125.
- 유재원. (2003).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참여민주주의의 시각에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2): 105-126.
- 유창복. (2013).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과 거버넌스의 과제. 마을공동체 1년, 시민토론회 자료집. pp.4-19.
- 이소영. (2006). 마을 만들기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서울시 북촌 지역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25: 99-130.
- 이용연·염일열. (2002).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한 로컬 거버넌스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8: 201-219.
- 이재완. (2013).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비선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189-223.
- 이지현. (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휴카페, 북카페 사업’ 부실당어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보도자료. 7.5.
- 이지혜·이명훈·전병혜. (2009).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도에 관한 영향구조 분석: 광주광역시 북구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4(1): 73-85.
- 임도빈·정현정·강은영. (2012). 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경쟁력의 관점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2): 1-29.



- 전용식. (2008). 정보화마을의 사회적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전자상거래학회지」, 9(2): 63-77.
- 정광호. (2008). 정책 리더러시(policy literacy) 함수 분석: 시민활동변인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4): 73-104.
- 정하용. (2007).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3): 1-29.
- 조정래. (2012). 서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방향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 정책보고서 제3호.
- 진영환·류승환·김진범. (2008).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만들기: 사례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수도권연구」, 안양대학교 수도권발전연구소. 5: 173-187.
- 하정봉·길종백. (2013). 주민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익, 제도, 이념 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20(3): 249-274.
- 「한국일보」. (2012). 서울시 “2017년까지 마을공동체 975개”: 일부선 “사업 모호” 비판. 9.11.
- 한상일. (2006).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지역공동체 참여: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5(1): 35-66.
- 홍진이. (2013). 마을 만들기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공사회연구」, 3(2): 151-169.
- 渡邊俊一. (編). (2004). 市民参加のまちづくり: マスタープランづくりの現場から. 이건호 역.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도시계획 수립의 현장으로부터. 대전: 목원대학교 출판부. 1999.
- 中島恵理. (2009). 英國の持続可能な地域づくり: パートナースhipとローカリゼーション. 김상용 역. 영국의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파트너십과 지방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 Adler, R. P., & Goggin, J. (2005). What Do We Mean By “Civic Engagement”?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3(3): 236-253.
- Akoh, E. (2011). Barriers to Public Participation in Developmental projects: A Nigerian Community Perspective(Case Study of the Gbaran-Ubie Oil And Gas Project).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of Rhodes University.
- Berger, G. (1991). Factors Explaining Volunteering for Organizations in General and f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Particula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eller School of Social Welfare, Brandeis University.
- Birkland, T. A. (2011). *An Introduction to the Policy Process: Theories, Concepts, and Models of Public Policy Making*. Armonk, N.Y.: M.E. Sharpe.
- Blinder, A. S., & Krueger, A. B. (2004). What Does the Public Know about Economic Policy, and How Does It Know I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04, 1, pp.327-397.
- Booth, J., and Richard, P. B. (2001). Civil Society and Political Context in Central America. In Edwards, B., Foley, M., and Diani, M. (ed.), *Beyond Tocqueville*. Hanover and London: Tufts University.
- Burn, S., & Konrad, A. M. (1987). Political Participation: A Matter of Community, Stress, Job Autonomy, and Contact by Political Organizations. *Political Psychology*, 8(1): 125-138.
- Cary, L. J. (ed.). (1970). *Community Development As Process*, Columbia, MO: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 Chambré, S. M. (1987). *Good deeds in old age: Volunteering by the new leisure clas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Claibourn, M. P., & Martin, P. S. (2000). Trusting and Joining? An Empirical Test of the Reciprocal Nature of Social Capital. *Political Behavior*, 22(4): 267-291.
- Conway, B. P., and Hachen, D. S. (2005). Attachments, Grievances, Resources, and Efficacy: The Determinants of Tenant Association Participation Among Public Housing Tenants. *Journal of Urban Affairs*, 27(1): 25-52.
- Creighton, J. L. (2005). *The Public Participation Handbook: Making Better Decisions through Citizen Involve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Curtis, J. E., Grabb, E., and Baer, D. (1992).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 in fifteen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 139-152.
- Dalton, R. J. (2008).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Washington, DC: CQ Press.
- Delli Carpini, M. X., and Keeter, S. (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Diduck, A. P., and Sinclair, A. J. (2002). Public Involvement in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Case of the Non-Participant. *Environmental Management*, 29: 578-588.
- Edwards, J. N., and White, R. P. (1980). Predictors of Social Participation: Apparent or Real?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9(1-4): 60-73.
- Fishkin, J. S. (2003). *Democracy and Deliberation: New Directions for Democratic Reform*. 김원용 옮김. 민주주의와 공론조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 Hodgkinson, V., and Weitzman, M. (1992).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The Independent Sector.
- Kaid, L. L., McKinney, M. S., & Tedesco, J. C. (2007). Political Information Efficacy and Young Voter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9): 1093-1111.
- Kaufman, J. (1999). Three Views of Associationalism in 19th Century American: An Empirical Examin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4(5): 1296-1345.
- Keogh, B. (1990). Public Participation in Community Tourism Plann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3): 449-465.
- Koehler, B., & Koontz, T. M. (2008). Citizen Participation in Collaborative Watershed Partnerships. *Environmental Management*, 41(2): 143-154.
- Lall, S. V., Deichmann, U., Lundberg, M. K. A., and Chaudhury, N., (2004). Tenure, Diversity, and Commitment: Community Participation for Urban Service Provision,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Marschall, M. J. (2004).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Neighborhood Context: A New Look at the Coproduction of Local Public Good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7: 231-244.
- Musso, J. A., Gaeke, M., and Avery, C. (2001). The Geography of Neighborhood Organizational Activity in Los Angeles, Neighborhood Participation Project, School of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Newton, K.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 201-214.
- Nie, N. H., Junn, J., & Stehlik-Barry, K. (1996).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America*. London: Univ. of Chicago.
- Olsen, M., Perlstadt, H., Fonseca, V., and Hogan, J. (1989). Participation in Neighborhood Associations. *Sociological Focus*, 22(1): 1-17.
- Oropesa, R. S. (1992). Social Structure, Social Solidarity, and Involvement in Neighborhood Improvement Associations. *Sociological Inquiry*, 62(1): 107-118.
- Peterson, S. (1992). Church particip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spillover effect. *American Politics Quarterly*, 20: 123-139.
- Putnam, R.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78.
- Putnam, R. D., Leonardi, R., & Raffaella Y. N. (2000).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안청시 외,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1993.
- Reef, M. J., and Knoke, M. (1999). 'Political Alienation and Efficacy. In Robinson, J. P., Shaver, P. R., and Wrightsman, L. S. (eds.).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New York: Academic Press.
- Richardson, B. J., & Razzaque, J. (2006).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In Richardson, B. J., and Woods, S. (eds) *Environmental Law for Sustainability*. Hart Publishing Oxford. pp.165-194.
- Schlozman, K. L., Burns, N., & Verba, S. (1994). Gender and the Pathways to Participation: The Role of Resources. *The Journal of Politics*, 56(4): 963-990.
- Stinchcombe, K., & Gibson, R. B. (2001).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s a Mean of Pursuing Sustainability: Ten Advantages and Ten Challenges. *Journal of Environmental Assessment Policy Management*, 3(3): 343-372.
- Verba, S., & Nie, N. H.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Webler, T., Tuler, S., Shockey, I., Stern, P., & Beattie, R. (2003). Participation by Local Governmental Officials in Watershed Management Planning.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16: 105-121.
- Williams, J. A., Jr. and Ortega, S. T. (1986). The Multidimensionality of Joining.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15(4): 35-44.

**이재완(李在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2013)를 받고, 동대학원 BK21플러스사업단의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공개, 재정정책, 정책수단, 정책평가, 조사통계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상수도수질 정보공개 효과 분석”(2013),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2013), “외국인 신뢰가 다문화정책지지에 미치는 효과 분석”(2013)이 있다(noso791@gmail.com).

## 부록. 주요 연속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주민 참여	1.000											
2.정책 인지도	0.243***	1.000										
3.사회 신뢰	0.086***	0.002	1.000									
4.공공 기관신뢰	0.056***	0.036***	0.252***	1.000								
5.생활 만족도	0.075***	0.022***	0.109***	0.153***	1.000							
6.시민 자부심	0.077***	0.048***	0.081***	0.080***	0.157***	1.000						
7.거주 기간	0.049***	0.005	0.022***	-0.002	0.013***	-0.039***	1.000					
8.이념 성향	0.119***	0.058***	0.104***	0.056***	0.098***	0.064***	-0.039***	1.000				
9.연령	0.027***	0.036***	0.055***	0.023***	0.019***	-0.083***	0.240***	-0.074***	1.000			
10.교육	0.035***	0.090***	0.020***	-0.002	0.078***	0.073***	-0.146***	0.074***	-0.108***	1.000		
11.소득	0.010**	0.058***	-0.011**	0.007	0.136***	0.130***	-0.057***	0.044***	-0.162***	0.211***	1.000	
12.가구 원 수	-0.006	0.047***	-0.004	0.022***	0.016***	0.051***	-0.039***	0.047***	-0.211***	0.056***	0.470***	1.000

주: \* p<0.1, \*\* p<0.05, \*\*\* p<0.01

## Abstract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Seoul Village Community Projects: Focused on Policy Literacy**

Lee, Jae-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policy literacy for Seoul village community projects on citizen participation. To this end, 「2012 Seoul Survey」 data were used. In this study, I compared the mean of citizen participation among three policy literacy groups(“low-level group”, “middle-level group” and “high-level group”) through ANOVA. As a result, citizen participation of these groups have a significantly different means. And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olicy literacy for Seoul village community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citizen participat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policy literacy serves as a basic premise of citizen participation. To raise policy literacy for village community project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borough offices have a lot of investment on education and PR. It is empirically supported that these activities are connected to citizen participation. In future study, analyses of the impact on each type of village communities are need.

Key Words: village community projects, policy literacy, citizen participation